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40
----------	------

발의연월일 : 2025. 1. 20.

발 의 자 : 김남희·조계원·김선민
김우영·김문수·이연희
김정호·김 윤·전진숙
임오경·장종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말하며,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11세 ~ 18세 인구의 5 ~ 8%인 18만 4천명에서 29만 5천명 정도로 추정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과 생계활동으로 인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어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18세 미만의 돌봄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돌봄 주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뿐 아니라 미

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봄대상자”란 고령·장애·질병·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족, 지인을 말하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란 돌봄대상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학업, 직업훈련, 문화·여가생활 등 생활유지 및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돌봄서비

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모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②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 및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대상자”란 고령·장애·질병·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지인을 말한다.
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란 돌봄대상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들이 지역사회 내 복지, 보건, 주거, 법률, 금융,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2. 지역사회 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병원,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
3.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다양한 민관 서비스 제공 시 공공성 향상

4. 18세 미만인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4조, 제5조에 부합하도록 돌봄부담에서 벗어나 아동의 권익과 안전이 존중되고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여건 조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별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실시

제6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3.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4.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
5.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6.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8. 그 밖에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돌봄 아

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 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

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당사자 및 관련 단체의 장이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제10조(자기돌봄비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학업, 직업훈련, 문화·여가생활 등 생활유지 및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의 지급 대상·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돌봄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돌봄대상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종류, 지원 대상·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생계와 돌봄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 적성검사 및 진로 상담프로그램
2.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직업 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직업 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 및 상담을 포함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부여,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의 종류, 지원 대상·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문화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

·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개최, 국·공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자가 공공의 아동·청소년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례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사회보장급여 수급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또는 돌봄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또는 돌봄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제4장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전담지원 기반 구축

제22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조기 발굴 및 지역사회 지원의 연계
3.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자조모임 지원
6.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7. 그 밖에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의 자격,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청년에게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청년에게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 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부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립·관리·보유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자료 중 학생의 인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전자의무기록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5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복지 전담공무원) 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에 각각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등 지역 단위에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담공무원 1인이 현실적으로 담당 가능한 돌봄아동·청소년·청년 가구 수를 고려하여 적정 수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⑥ 관계 행정기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복지단체(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5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지원 신청의 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동의를 받아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1. 전담공무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5. 그 밖에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복지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비밀유지 의무)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다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제31조를 위반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